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정책질의서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교민단체연대

2021. 12. 15.



■ 목 차

분야		페이지
1	교육	03
2	노동	04
3	생태·환경	05
4	이주난민	07
5	장애인	09
6	청년	11
7	토지·부동산	13
8	한반도	14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시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약제안서



정책질의서

문 의 김현아 사무국장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02-794-6200 cemk@hanmail.net

■ 교육

질의 1.

미래교육에서 지향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낮추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인구 수 감소와 함께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질의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과 고등학교 교사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논술형 수능 중심의 대입전형과 성인학습자 전형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질의 3.

대학 간 서열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 변

■ 노동

질의 1.

후보님께서서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 산재 1위' 라는 오명을 없애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공립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해 준비된 정책이 있으신지요?

질의 3.

'인국공(인천국제공항) 논란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취업대기자들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질의 4.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질의 5.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앞으로의 로드맵이 있는지요?

답 변

■ 생태·환경

질의 1.

현재의 2030NDC에 대한 견해와 탄중위에서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2030NDC의 목표치는 낮고, 시나리오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가진 기업들을 오히려 책임에서 해방시켜 준 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나리오는 '녹색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그간 온실가스 배출로 위기를 초래한 기업들에게 오히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공학적 해결책들을 포함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갈등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질의 2.

일각에서 주장하듯 원전으로 석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 급의 원전 약 20기 이상이 필요하고, 기존 원전의 노후화로 인해 폐쇄할 시 신규 건설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건설시한을 생각할 때 시급한 기후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원전은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처치곤란한 폐기물과 사고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원전은 미래의 에너지로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원전이나 기후위기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방향의 전환은 시대적 요청이자 세계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을 정책목표로 내놓았지만 임기중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난 상황입니다.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서 현 정부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고, 만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걸었다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목표(발전비율, 달성년도)와 실현 방안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3.

기후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생태계 회복과 보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개발은 지자체를 통해 이익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현재의 개발수익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미래세대에게 전가됩니다. 특히나 난개발로 인해 대한민국 곳곳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공항계획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함에 따라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개발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이주 난민

질의 1. 난민 관련 정책 질문

현재 난민 정책은 난민인정 절차의 공정성 및 인프라가 부족하고,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 적합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인정절차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난민법 개정, 인프라 구축, 난민위원회 상설화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외국인 구금 관련 정책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심사 보장, 외국인 구금 상한 설정 및 이주아동 구금 금지에 대한 ‘찬반’을 밝혀주시고, 찬성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추진방식 및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외국인 노동자 정책 관련 질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허가제도 및 체류불안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미등록 이주아동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관련 질문

제한적인 내용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는 현행 법무부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문제 및 외국인의 출생등록 제도가 없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행 법무부의 대책을 전면적으로 보완(기간 수정, 해외 출생 포함, 범칙금 납부 방법의 합리화 등)하는 것과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장애인

질의 1.

현재의 장애등록제도는 장애인 등급 중경 단순화로 표현될 만큼 제도의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학적 일률적 판정 기준 대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실현을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책되려면 장애인의 욕구 판정에서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전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전달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애계의 의사는 얼마나 충실히 정책에 검토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예산의 범위까지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어 이미 장애인복지법은 산만하고 비대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권리옹호와 서비스지원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공급자 중심 제도들이 남아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장애인 권리체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체계를 도입하며, 학대에 국한되어 있는 지금의 권리옹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이 모두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후보께서는 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시고,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이 동의하시는지, 조금 더 진일보한 입법을 위하여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3.

가난한 장애인을 양산하는 지금의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당연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아직도 많으며, 경증 장애 위주로 운용되는 장애인 취업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기준과 맞물려 사실상 장애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주체가 아닌 무기력한 약자로 살아가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애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매우 중요한 탈시설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변

■ 청년

질의 1.

1. 청년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설보호종료아동(만18세)의 자립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월급으로는 ‘내집마련’은커녕 전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옥고’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주거빈곤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후보님께서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내 어떤 정책을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질의 2.

코로나19를 지나며 많은 청년들이 학습과 취업 등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학습권 침해, 채용시장 위축, 진로를 위한 다양한 경험 기회 상실, 사회적 관계 단절,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과 무기력, 우울과 자살충동은 청년이 내일을 꿈꾸기 어렵게 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진학 기회와 일경험 및 일자리에 대한 후보님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3.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에게는 마음건강돌봄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다양한 이유로 청년들의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그것은 청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 통계를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도 청년들의 폭발적인 신청으로 조기 마감된 바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비용은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문턱이 높습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돌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자체 보건/복지센터 프로그램의 확대 정책을 고려해주실 수 있는지요?

질의 4.

보통의 청년들은 성인이 되면 아무런 자산과 자원 없이 사회로 떠밀리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수천만원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안고 졸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는 데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을 보내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학력이나 경력을 이유로 차별적 임금을 받으며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생활경제나 재무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 없기에 이들의 소득-지출은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늪에서 청년들은 실패가 두렵고 꿈에 도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청년기초자산제, 청년기본소득, 청년예술인기본소득, 학자금대출이자감면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 방식이 논의되는 가운데, 후보님께서서는 청년의 출발선 앞에 어떤 정책들로 청년에게 꿈꾸고 도전할 기회, 건전한 금융복지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답 변

■ 토지·부동산

질의 1.

부동산가격 폭등은 빈부격차 심화 및 세대간 갈등, 근로의욕 감퇴 및 사행심 만연 등 우리 사회에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의 근원인 지대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후보님의 정책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2.

대장동 사건처럼 토지용도전환으로 인한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이 부동산개발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용도전환 및 인허가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답 변

■ 한반도 (대북관계, 평화, 통일)

질의 1.

후보께서 갖고 계신 한반도 평화 분야의 철학을 기술해 주십시오.

질의 2.

후보께서 한반도 평화 관련 자문을 구하는 정책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질의 3.

종전선언에 찬/반 정견과 그 이유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다른 경제협력 방안을 개발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질의 5.

우리의 평화 정책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외교적 지향이 상이할 경우, 지지를 얻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교시민단체연대

02-794-6200 cemk@hanmail.net